

고양지방법원 승격이 왜 필요할까?

취임 전부터 고양시민의 사법 서비스 개선을 주장한 이재준 시장.

이에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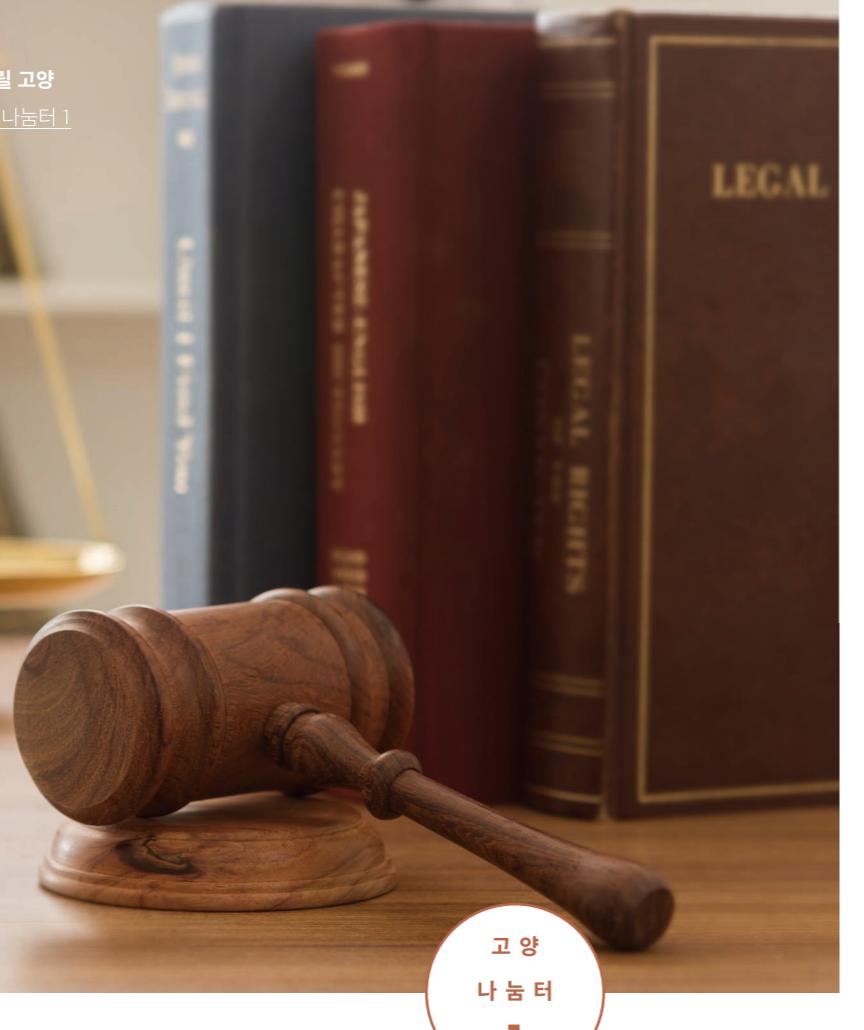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고양지원 지법 승격 추진위 구성 조례를 제정했고 5월에는

추진위가 발족하면서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그런데 시민들은 법원이 이미 마무역 근처에 있는데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할 것이다.

글 이경현(고양소식 편집위원)



고
양
나
눔
터

1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말고 또 있다?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배웠다.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불복하면 고등법원 그리고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다고 알고 있다.

지방법원은 줄여서 '지법', 고등법원은 '고법'이라고 부르는데 장항동에 위치한 고양지법이 사실은 '지법'이 아니라 '지원'이라니 이건 또 뭔가 싶을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철원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등이다. 쉽게 생각해 경기도 북부지역이 의정부지법 관할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3심제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지방법원 재판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 사람들은 무조건 의정부까지 가야 한다.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평균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2003년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고양지원을 지금의 장항동 자리에 개청했다.



고양지원의 한계



고양지원의 개청은 의정부지법까지 가지 않고 고양시민과 파주 시민이 가까운 일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의 절약 등 많은 편익을 주고 있으나, '지원'인 탓에 모든 재판을 진행하지는 못한다. 일상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 신청 그리고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은 여전히 의정부지법 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방법원 설치



전국 지방법원은 총 18곳이며 그중 5곳이 서울특별시에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2곳밖에 없다. 올해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 서울은 977만 216명이고, 경기도는 1,311만 6,579명이다.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에 4곳의 지방법원이 더 생겨도 된다.

고양지원이 한 해 동안 처리하는 건수가 제주지법, 전주지법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면 고양시민들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렇다면 '간판'만 바꿔 달면 해결될까? 아니다. 고양지방법원으로 승격이 타당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여럿 있다.

첫째는 법률 개정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다. '고양파주지법'을 설치하자는 윤후덕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문제는 같은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이후에도 3건이나 발의돼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한다.

둘째는 공간과 인력 증가에 따른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법원으로 승격된다면 처리할 수 있는 분야와 건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공간과 인력이 함께 늘어나야 한다. 결국은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 4곳(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현재 '특례시'를 추진 중이다. 그중 한 곳인 수원시는 지난 3월 고법과 고검을 개청했다. 수원 인구는 119만 9,599명으로 고양보다 약 15만 명 많을 뿐인데 기존 지법과 지검 외에 고법과 고검까지 설치됐다. 이제는 고양시민들도 신속한 재판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 없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4월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앞에서 지방법원 승격 공동성명 발표



고양시장, 파주시장이 고양지원장에게 지방법원 승격 공동성명서 전달

